

투데이칼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문화정책의 전망과 기대

지난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숨 가쁜 두 달을 보낸 후, 마침내 8월 13일 ‘이재명 정부 5년 국정운영 방향 대국민 보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123대 국정과제를 수립했으며, 이 중 문화 분야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문화정책 방향에 대해 거는 기대는 날다르다.

새 정부는 ‘기술 선도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K-컬처를 바이오, 방산, 기후테크 등과 함께 미래 전략 산업이자 글로벌 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명확히 했다.

또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AI, 바이오와 더불어 콘텐츠 산업을 핵심 동력으로 제시하며 문화가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문화강국을 실현할 적임지로 최후영 문화부장관을 임명한 바 있다.

특히, 12대 중점 전략 과제 중 하나로 5대 문화 강국 실현을 내세운 것은, K-컬처의 글로벌 영향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 만 호
본보 경제부장

2030년까지 K-컬처 시장 규모를 300조 원시대로 달성하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3천만 명에 이르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정부의 높은 기대를 방증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금융 및 세제 지원 확대, 장르별 전략적 지원 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약속되어 있어, 국내 문화 콘텐츠 기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세계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게 된다.

문화예술 창작 역량 강화와 향유 기회 확대 또한 이재명 정부 문화정책의 중요한 축이다.

새 정부는 K-컬처의 공간인 문화예술 창작 역량과 향유 기반을 강화하고, 창작 공간 및 예술인 복지 확대,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예술 역량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특정 세대나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남녀노소 누구나 문화와 스포츠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특히, ‘문화강국위원회’ 설치를 통해 정책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은 문화정책이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나아가, ‘어는 지역에서나 고르게 교육, 문화,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약속은 수도권에 집중된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를 통해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건전하고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 조성 또한 문화 강국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보도와 편성의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와 규제 합리화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특히, K-콘텐츠의 해외 진출적 지원은 국내 콘텐츠의 유통 체

널을 다변화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동시에, 허위 조작 정보 유통 방지와 플랫폼 및 앱마켓에서의 피해 예방을 통해 건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은 문화 콘텐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이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문화정책은 단순히 문화 산업의 성장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 문화가 스며들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K-컬처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은 대한민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는 다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이러한 원대한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은 문화정책은 국민에게 큰 기대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5년간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제시한 문화정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5대 문화 강국’이자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을 누리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문화가 단순히 소비되는 것을 넘어, 국민을 통합하고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국민 모두가 그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기를 희망해보며 그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소망한다.

사설

민주, 신속한 개혁 입법으로 국민께 희망 줘야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3대 개혁 입법을 완수하고 김건희·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창래 대표는 “개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해 온 지배 카르텔이고 개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권력에 기생해 온 부역자들”이라며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동의 힘으로 더 큰 저항과 퇴행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살기하지 않겠다”면서 “검찰, 언론, 사법 등 3대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민생, 성장, 개혁, 안전의 4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24개 중점 법안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 이를 통해 민생 경제와 민주주의를 모두 바로 세우고 신속하게 국

가 정상화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 국가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다.

민주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개혁과 확실한 민생 회복으로 분명한 희망을 주어야 한다.

정 대표는 김건희씨가 지난달 29일 구속기소 당시 “가장 어두운 밤에 달빛이 밝게 빛나듯이 저 역시 저의 진실과 마음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견디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도 “어둠속은 신파국 연기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두운 밤 달빛은 남편 윤석열이 호수 위에 비친 달그림자에 대한 부장부수 폄비네이션 플레이다. 한마디로 웃기는 부부”라면서 “국가 망신 꼴불견 부부가 참회하는 길은 감옥에서 조용히 성찰하고 반성하며 여생을 보내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광복 80년 사회 변화상

한국 사회가 광복 후 80년간 크게 변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국내총생산(GDP)은 1953년 477억원에서 2024년 2557조원으로 약 5만3000배 늘었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67달러에서 3만6000달러 수준으로 도약했다.

1970~80년대 정부 주도로 성장해 반도체·자동차·IT산업 중심의 첨단산업 구조를 확립했다.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 구조도 극적으로 변화했다.

출산율은 1960년대 6명대에서 지난해 0.75명으로 떨어졌고, 고령인구 비중은 19.5%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1955년 18.3%에서 지난해 50.8%로 높아졌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3.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8년 연

속 감소하다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했다. 함께 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0.03명 증가했다. 다만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는 최하위다.

가족 형태 역시 대가족에서 핵가족을 거쳐 1인 가구 중심으로 변하면서 평균 가구원수는 1970년 5.2명에서 2023년 2.2명으로 줄었다.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23년 83.5세로 늘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며 아파트가 대표적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고, 자동차 등록대수는 1966년 12만대에서 지난해 2630만대로 급증했다.

광복 이후 8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이룬 성과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독자제언

교묘하게 진화하는 ‘노쇼 사기’, 우리 모두의 경계가 필요하다

예약만 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가 이제는 단순한 무례를 넘어, 철저히 계획된 조직범죄로 변질되고 있다. 범행 수법은 날로 치밀해지고 사회 전반의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 자영업자부터 농업·의료 업계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지금, 개인의 경각심이이탈로 최후의 방어선이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노쇼 사기’는 본격적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범인들은 대선 캠프 관계자나 유명 정치인·연예인의 메시지를 사칭했다. “행사에 필요한 고가 의인이나 특수 식자재를 대신 구매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대규모 예약을 잡았다. 피해자들은 이름값에 속아 대리 구매를 했다가 대금을 때이고 준비한 예약분까지 손해를 보는 이중 피해를 입었다.

대선이 끝난 뒤 범죄는 한층 교묘해졌다. 사칭 대상이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교도소 등 공공기관으로 확산했다. “OO군청 지역개발과 직원”, “OO교도소 교도관”처럼 실제 있을 법한 직함을 내세우고, 위조 명함과 가짜 공문서까지 준비했다. 범죄 조직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대포폰과 위조 서류를 공급하며 범행

을 지원했다. 범죄의 교도화와 국제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이다.

피해 업종도 빠르게 늘고 있다. 초기에는 식당·카페·숙박업소 등 접객업이 주 표적이었지만, 이제는 농약사, 인력사무소, 영농법인, 의료 기업까지 확대됐다. 범인들은 대량 구매나 단체 이용을 미끼로 접근한 뒤, 업종과 무관한 고가 물품을 대신 결제하게 하거나 배송을 요구한다. 한순간의 방심이 한 달 수입을 날리고 심하면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째, 대량 예약이나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금액과 품목을 불문하고 대리 구매 요청은 즉시 거절해야 한다.

셋째, 위조 명함이나 공문서가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112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과 지자체가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지만, 결국 이 범죄를 막는 최후의 방어선은 시민 개개인의 주의다. 앞으로도 ‘노쇼 사기’는 형태를 바꿔가며 등장할 것이 분명하다. 지금이이탈로 모두의 주의와 협력이 절실한 때다.

이주연 교정경찰서 해리파출소경사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